(2017. 6. 17 시행)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행정학 : (D) 책형]

[김 시 동 선생님]
(중앙로/충남대) **제일고시학원** / www.okpass.com

※ 해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공개되면 함께 첨부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④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재의요구는 불가하다.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답 ④>
<해설>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에 속한다.

	경제규제(광의)		사회규제
	경제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규제 대상	• 개별 산업 • 기업의 본원적 활동	• 모든 산업 • 기업의 본원적 활동	• 모든 산업 • 기업의 사회적 행동(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기업 행동)
규제 성격	차별적 · 재량적	비차별적 · 비재량적	비차별적 · 비재량적
규제 목적	• 경쟁의 제한 (과당경쟁방지) • 자원보존, 산업육성 • 교차보조*의 필요성 • 폭리 · 부당이득 방지	• 경쟁의 촉진 (독과점적 횡포 방지)	• 시장경쟁과는 직접적 관련성 없음 • 삶의 질 확보

사 례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주로 수평적 결합을 강하게 규제), 경제력 집중억제 등(상호출자 및 지급보증의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답 ③>

<해설> ③의 지문처럼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의사소통이 저해되고 조정이 어려움이 나타난다. 따라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0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답 ②>

<해설>

① 인사상 특전 뿐만아니라 상여금 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식적 고충처리>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재심청구나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 :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④ 성과상여금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답 ②>
<해설> ②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니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업무평가는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제도이다. 정부의 성과관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사업·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제도는 크게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지자체의 자체평가, 특정평가, 지자체의 합동평가, 공공기관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소속기관의 정책을 포함해 성과관리 또는 자체평가를 시행 • 자체평가는 기관의 임무, 전략 및 성과목표, 평가 대상 연도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자체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함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가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또는 주요 현안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 시책 등에 대해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
공공기관 평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함 • 공공기관평가는 개별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답 ③>

<해설> 보통의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정답을 알수 있다. 즉 ③의 지문 중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라 했어야 한다. 문제구조화라 함은 문제를 명확히 하여 제 3종오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답 ①>

<해설> 하향식 집행방법은 핵심적인 정책이 있고 비교적 구조화된 상황(정형화된 상황)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복잡한 조직보다는 계층제적 통합성이 강력할 때 집행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책집행의 성공요인(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집행분석)

문제요인	타당한 인과모형이 있어야 집행이 용이하다.
	규모가 작고 구분이 명확해야 집행이 용이하다.
	대상집단의 행태가 단순하면 집행이 용이하다. 요구되어지는 행태의 변화가 작을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집행체제 요인	목표가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재원이 많다면 집행이 용이하다.
	계층적 통합성이 강화되면 조정이 쉬워져 집행이 용이하다.
	집행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는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집행규칙이 공식화·표준화되어 있으면 집행이 용이해진다.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와 의회 등(국외자의 참여)의 감독의 집중은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환경요인	일반대중 및 언론, 관련기관, 대중매체의 지지와 협조가 높으면 집행이 용이해진다.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답 ③>

<해설> 법률제정은 국회가,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답 ④>
<해설> ④는 Vroom의 이론이 아니라 Adams의 공정성 이론이다.

10.「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답 ①>
<해설>
※ 공무원 보수규정 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답 ④>
<해설> 빅데이터의 3v(volume, variety, velocity)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②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③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분업은 업무량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공급이 불안정한 복잡동태 환경보다는 안정된 한경에 유용성이 있는 관료제적 측면이다.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답 ① >
<해설>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 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즉 ①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답 ④>
<해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 즉 2015년 1월 1일 부로 삭제)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답 ②>
<해설> ②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적 공식적 통제방식이다.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답 ② >
<해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우리나라는 법정외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령의 위임과는 무관함을 유의하자.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③>
<해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있다.

분 류	개 념	교부 주체	용 도	재 원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가 1 이하인 지자체에 교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될 경우 부족분을 지급한다.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이며 이 수치(재정력 지수)가 1을 넘으면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력 지수가 1에 미달되면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 시·도 및 시·군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자치구에는 직접 교부하지 아니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일반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특별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행정자치부 장관	특정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정자치부 장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국민안전처장관	특정재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교부	행정자치부 장관	일반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답 ④>

<해설> ④ 배태성(embeddedness)이란 사회문화적 측면이 인간의 인지, 상징, 도덕적 기반구조에 내재화됨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당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정부기업예산법」
③「예산회계법」
④「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답 ②>
<해설>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내용이다.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③>
<해설> ③ 설명이 거꾸로 되어있다.